

천안시민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실태와 출산장려지원정책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도미향** · 최윤선*** · 김민정**** · 김응자*****

요 약

본 연구는 천안시민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자녀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안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발전방안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에 반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자녀양육 지원정책 모두 전반적으로 본인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천안시민의 자녀관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에 자녀양육 과정에 겪는 부담감은 비교적 높게 인식함과 동시에 일·가정양립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자녀관,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천안시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천안시민, 임신·출산 및 양육, 출산장려지원정책

논문제출일: 2019. 5. 27 최종심사일: 2019. 6. 13 게재확정일: 2019. 6. 22

* 본 연구는 2017 천안시 출산장려사업 발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Min Jung, Dep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E-mail: longmin@nsu.ac.kr

I. 서론

저출산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되는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을 시점으로 2000년 1.47, 2008년 1.19명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12년 1.30명으로 다소 올랐으나 2016년에는 다시 1.17명, 2018년 0.98명으로 1이하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9). 선진국의 경우 100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진 변화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꾸준한 30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결과 OECD 가입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 지속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교육 불균형 및 복지재정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삼식, 정경희, 2010; 전운영, 2017).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국가기관과 관련 정책 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들이 있어 왔다. 특히, 정부는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3차 기본계획’의 6가지 핵심추진방향인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 제고,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 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펼치는 노력에 비해 출산율 극복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2017년부터 생산인구 감소추세와 함께 2018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된다는 보고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장려 방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산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출산 장려정책의 개선방안, 지역사회 연계와 정책참여, 보육정책의 활성화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김정옥, 2005; 도미향, 2011, 2015; 배민환, 2007; 유계숙, 2012; 이경숙, 2012; 이명석 외, 2012; 이원희, 2004). 특히, 저출산 원인과 관련하여 미혼자의 결혼연장, 독신생활, 초혼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침체 및 직장불안

정,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자녀효용가치 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결혼 가치관의 변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가족해체 등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밝히고 있다(김승권, 2003; 신호영, 2009; 이삼식, 2006).

구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초혼 연령의 상승, 여성의 사회참여와 진출 증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가족 내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육아지원 기능의 미흡, 자녀양육 부담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및 결혼관이나 자녀관 등의 가치관의 변화 등이 출산을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도미향, 2015; 유계숙, 2012; 이경숙, 2012). 또한, 보편혼이 지배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이나 자녀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의식과 함께 변화하는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비, 주거비, 주택구입, 고용불안정 및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출산을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신호영, 2009; 최숙희, 김정우, 2005; 통계청, 2011). 세계 최저 수준인 현재의 출산을 하락을 저지하고 향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현실적 방안, 양성평등의 환경조성, 가족 유형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관은 개별적인 지원이나 단기 간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김태현 외, 2006),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 외에도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에 있어 개별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중앙정부만이 전담하여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가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문은영, 권미애, 전해정, 2016; 한영숙, 2009)이 수행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이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역량을 집중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실증적 증거가 된다.

본 연구의 거점이 되는 천안시는 최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19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 42.2세보다 젊은 38.7세로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출산합계율 또한 1.11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98명보다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9명, 2017년 1.16명, 지난해 1.11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연간 출생아수는 2013년 6356명, 2014년 6110명, 2015년 6412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출생자 수는 2016년 6052명으로 줄었고,

2018년에는 5213명으로 급감했다(충청투데이, 2019). 이러한 변화에 따라 천안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 인구문제 선제대응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천안시 인구정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현행 출생축하금을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을 첫째, 둘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현상과 함께 매년 출산율이 1%씩 감소하고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여전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의 노력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데, 현재 천안시를 거점으로 한 연구는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14개소 만 0~5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장석주, 2012)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라,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안시민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정책의 인식과 태도 및 자녀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안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발전방안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천안시민의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실태(정책 혜택의 경험, 기관 인지도, 저출산 원인,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자녀관,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는 어떠한가?
2. 천안시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정책에 관한 인식과 태도, 자녀관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성별은 남자가 10명(4.1%), 여자가 231명(95.9%)로 여자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30-39세가 131명(54.4%)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83명(34.4%), 20-29세가 21명(8.7%)의 순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165명(68.5%)로 가장 많았고, 고졸 56명(23.3%)순이었으며, 월평균소득은 300-450만원 미만인 78명(32.4%), 450-600만원 미만인 65명(27.0%), 300만원 미만인 53명(21.9%), 600만원 이상이 45명(18.7%)의 순이었다. 현재 자녀수는 2명이 133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 73명(30.3%), 3명이 22명(9.1%), 없는 경우는 12명(5.0%)의 순이었다. 향후 출산계획은 ‘없다’가 202명(8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있다’는 39명(16.2%)이었다.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 출산의 수는 1명이 30명(12.4%)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형태는 맞벌이 가정이 181명(75.1%)로 가장 많았고, 다자녀 가정이 11명(4.6%)의 순이었다. 가구형태에서 가장 많았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137명(5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41)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성별		향후 출산 계획	
남자	10(4.1)	있다	39(16.2)
여자	231(95.9)	없다	202(83.8)
연령		향후 자녀출산 수	
20-29세	21(8.7)	1명	30(12.4)
30-39세	131(54.4)	2명	8(3.3)
40-49세	83(34.4)	3명	0(0.0)
50세 이상	6(2.5)	4명 이상	1(0.4)
		무응답	202(83.8)
교육정도		가구 형태	
고졸	56(23.2)	신혼부부	9(3.7)

대졸	165(68.5)	맞벌이	181(75.1)
대학원 이상	20(8.3)	다자녀	11(4.6)
월 평균 소득		한부모	9(3.7)
300만원 미만	53(21.9)	장애아	1(0.4)
300-450만원 미만	78(32.4)	기타	30(12.4)
450-600만원 미만	65(27.0)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방법	
600만원 이상	45(18.7)	어린이집	137(56.8)
현재 자녀수		유치원	15(6.2)
없음	12(5.0)	조부모	25(10.4)
1명	73(30.3)	아이돌보미	1(0.4)
2명	133(55.2)	친인척	11(4.6)
3명	22(9.1)	기타	51(21.2)
4명 이상	1(0.4)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출산장려정책의 혜택경험,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내용과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 양육지원정책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 자녀관, 자녀양육부담,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 모든 척도는 자기보고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출산장려정책의 혜택경험,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 및 저출산 원인 등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1)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임신·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홍보하고 있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안시 지원 가이드북 임신·출산·육아’를 바탕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2가지 영역에서 답을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해당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

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등록 임신부 철분제 엽산제 제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양플러스 사업,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신생아 무료작명서비스,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지급,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양육지원정책과 관련된 인식 및 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양육지원정책과 관련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는 척도로 ‘천안시 지원 가이드북 임신·출산·육아’를 바탕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질문 문항에 대해 2가지 영역에서 답을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해당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셋째 이상 자녀 출생 축하금,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금 자금 대출지원 등이 포함된다.

3) 자녀관

사회의 빠른 변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결혼관 및 자녀관은 저출산의 문제와 많은 관련성이 있는 변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현욱(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관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있어야 하는 존재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자녀관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다.

4) 자녀양육부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양육에 대한 부담은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현욱(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양육부담 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다.’, ‘아이를 돌보는 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이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등을 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과정에서 겪는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었다.

5)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해 맞벌이 가정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여전히 가사와 양육은 여성이 맡아야 하는 인식은 여전하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욱(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5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있는 경우 일하는 여성은 경력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여성은 아이가 있으면 자신의 인생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이 일을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도맡아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에서의 어려움이 더 높음을 의미하며, 본 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10월에 천안시에 거주하는 264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천안시 거주하는 시민, 영유아 보육기관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응답시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뒤,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에 따라 배부한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응답한 후에 회수하였고, 대부분 일주일 내로 회수하였다. 배부한 질문지 모두 회수되었고(회수율 100%),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23부를 제외하고 24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저출산 원인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정도

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실태

1) 출산장려정책의 혜택 경험

출산장려정책의 혜택 경험과 관련하여, 혜택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93명(38.6%), 혜택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147명(61.0%)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이 6명(6.4%), ‘불만족’이 16명(17.0%), ‘보통’이 62명(66.0%), ‘만족’이 10명(10.6%)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은 내용으로는 임신 및 출산 관련해서는 고운맘카드, 출산진료비, 산전검사, 의료시설 지원비, 출산지원금, 철분제, 출산휴가, 셋째 출산 장려금 등이 있었고, 자녀양육 관련해서는 양육수당, 양육 및 보육비 지원, 육아휴직, 아이돌보미, 의료비 절감 및 지원, 아이사랑 카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

임신, 출산 및 양육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표 2>,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3.00),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2.30),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기관에 대한 인지도

순위	기관	평균	표준편차
1순위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3.00	1.37
2순위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30	1.15
3순위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2.13	1.11

3)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주요원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표 3>,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서(4.08점)’가 가장 높고, ‘자녀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3.93점)’, ‘자녀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3.81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3.72점)’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3> 저출산의 원인

순위	내용	평균	표준편차
1순위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4.08	0.90
2순위	자녀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3.93	0.95
3순위	자녀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3.81	0.90
4순위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3.72	0.95
5순위	가정에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3.67	1.01
6순위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3.65	1.05
7순위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때문에	3.17	1.08
8순위	자녀에게 엄매이게 되어 부모의 여유가 없어져서	2.95	1.07
9순위	자녀의 수보다 부모의 자기계발이 더 중요하므로	2.83	1.00
10순위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37	1.10

4)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우선,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2.71점으로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4>, ‘등록 임신부 철분제, 엽산 제공(3.76점)’, ‘국민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3.59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12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2.30점)’,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

터 운영(2.00점)’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으며,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1.88점)’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순위	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가
1순위	등록 임신부 철분제 엽산제 제공	3.76	1.17	비교적 높음
2순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3.59	1.07	
3순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12	1.30	
4순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99	1.28	비교적 낮음
5순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79	1.23	
6순위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2.71	1.39	
7순위	영양플러스 사업	2.64	1.23	
8순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2.52	1.20	
9순위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2.49	1.22	
10순위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급	2.48	1.22	
11순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2.30	1.10	
12순위	한국 마더세이트 전문상담센터 운영	2.00	0.99	
13순위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1.88	1.02	매우 낮음
전체		2.71	0.73	비교적 낮음

다음,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4.13점)’, ‘양육수당 지원(4.12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4.08점)’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에 ‘가족돌봄휴직(2.86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2.83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셋째이상 자녀)(2.81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2.78점)’,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2.78점)’,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2.70점)’,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2.62점)’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순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평가
1순위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4.13	1.06	매우 높음
2순위	양육수당 지원(만 0-5세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4.12	1.06	
3순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에게 15종 비용 지원)	4.08	1.09	
4순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3.98	1.13	비교적 높음
5순위	육아휴직	3.72	1.22	
6순위	출산 전·후 휴가	3.62	1.22	
7순위	배우자 출산 휴가	3.44	1.23	
8순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6종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무료 실시)	3.23	1.33	
9순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3.21	1.20	
10순위	자녀 세액공제	3.10	1.30	
10순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10	1.19	
11순위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3자녀 이상 가구)	3.09	1.39	
12순위	출생 축하금 (셋째이상 자녀)	3.05	1.29	
12순위	미숙아 의료비 지원	3.05	1.24	
13순위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3자녀 이상 가구)	3.03	1.32	
14순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02	1.21	
14순위	유산·사산 휴가	3.02	1.31	
15순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	1.28	
16순위	가족돌봄휴직	2.86	1.25	비교적 낮음
17순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 천적 이상아의 경우, 수술의료비 지원)	2.83	1.21	
18순위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셋째이상 자녀)	2.81	1.26	
19순위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	2.78	1.21	
19순위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2.78	1.23	
20순위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2.70	1.21	
21순위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	2.62	1.27	
전체		3.21	0.70	비교적 높음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에 반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아래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본인의 출산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2.6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2.84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82점)’, ‘등록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제공(2.82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2.76점)’는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응답자의 출산계획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 반면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2.50점)’, ‘국민행복 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2.47점)’,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2.23점)’는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응답자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순위	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가
1순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84	1.30	비교적 낮음
2순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82	1.31	
2순위	등록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제공	2.82	1.29	
3순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76	1.30	
4순위	영양플러스 사업	2.69	1.28	
5순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2.68	1.21	
5순위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2.68	1.31	
6순위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2.66	1.17	
7순위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급	2.59	1.25	
8순위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2.56	1.22	
9순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2.50	1.18	
10순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2.47	1.20	비교적 낮음
11순위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2.23	1.16	
전체		2.63	0.99	

한편 ‘자녀양육 지원정책이 본인의 출산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2.91점으로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7> 참조), ‘출산 전·후 휴가(3.36점)’의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양육수당 지원(3.18점)’,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

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3.18점)이 2순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3.16점)’이 3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2.69점)’, ‘셋째이상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2.58점)’, ‘셋째 이상 자녀 출생 축하금(2.56점)’ 등은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응답자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순위	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가
1순위	출산 전·후 휴가	3.36	1.22	비교적 높음
2순위	양육수당 지원(만 0-5세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3.18	1.34	
2순위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	3.18	1.30	
3순위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3.16	1.33	
4순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3.06	1.33	
5순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에게 15종 비용지원)	3.04	1.33	
6순위	가족돌봄휴직	3.03	1.27	
7순위	육아휴직	3.02	1.28	
7순위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	3.02	1.33	
8순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	1.29	
8순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00	1.30	비교적 낮음
9순위	배우자 출산 휴가	2.96	1.27	
10순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2.95	1.30	
11순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6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 실시)	2.88	1.37	
12순위	유산·사산 휴가	2.83	1.25	
12순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83	1.20	
13순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적 이상아의 경우, 수술의 료비 지원)	2.80	1.20	
13순위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2.80	1.24	
14순위	자녀 세액공제	2.79	1.23	
15순위	미숙아 의료비 지원	2.78	1.21	
16순위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2.73	1.19	
17순위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3자녀 이상 가구)	2.71	1.21	
18순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3자녀 이상 가구)	2.69	1.19	
19순위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셋째이상 자녀)	2.58	1.22	
20순위	출생 축하금(셋째이상 자녀)	2.56	1.21	
전체		2.91	0.92	비교적 낮음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자녀양육 지원정책 모두 전반적으로 본인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연관이 되는 문제임으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책들은 폐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들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6) 자녀관

조사대상의 자녀관은 단일요인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자녀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자녀는 있어야 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편이며, 자녀관이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자녀관

변인	사례수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녀관	241	8	1.00	5.00	3.71	0.70

7)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양육에 대한 부담은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으로,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변인	사례수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녀양육 부담	241	6	1.00	5.00	3.34	0.69

8)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은 단일요인으로 총 5개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68점으로,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어려움이 비교적 큼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변인	사례수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가정양립 인식	241	5	1.00	5.00	3.68	0.8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인식, 태도 및 자녀관 비교

1) 인식 비교

천안시민의 연령, 학력, 자녀수, 소득수준, 맞벌이 여부, 향후 출산의도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력에 따라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4.31, p<.05$), 구체적으로 고졸집단이 대졸집단에 비해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11>).

<표 11> 학력에 따른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식 비교

종속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사후검증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식	고졸(a)	56	3.81	0.65	4.31*	a>b
	대졸(b)	165	3.66	0.71		
	대학원 이상(c)	20	3.86	0.78		

* $p<.05$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29, p<.05$),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표 12>).

<표 12>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식 비교

종속변인	소득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사후검증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식	300만원 미만(a)	53	2.97	0.72	3.29*	a<d
	300~450만원(b)	78	3.26	0.63		
	450~600만원(c)	65	3.23	0.77		
	600만원 이상(d)	45	3.39	0.62		

* $p<.05$

또한 자녀수와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식 수준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r=.20$,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조사대상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음을 의미한다<표 13>.

<표 13> 자녀수와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식 수준간의 상관관계

변인	자녀수
자녀양육 지원정책 인식	.20**

** $p<.01$

2) 태도 비교

일반적 특성들 가운데 향후 출산 여부에 따라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 $p<.05$)<표 14>. 즉, 향후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있는 집단은 출산의도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4> 향후 출산의도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비교

종속변인	향후 출산의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임신·출산 지원정책 태도	있음	39	2.99	0.93	2.48*
	없음	202	2.57	0.98	

* $p<.05$

3) 자녀관 비교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라 자녀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06$, $p<.001$)<표 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 이상 집단은 20대와 30대 집단에 비해 자녀관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대와 30대 간에는 자녀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연령대에 따른 자녀관 비교

종속변인	연령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사후검증
자녀관	20대(a)	21	3.48	0.88	8.06***	a<c, b<c
	30대(b)	131	3.59	0.74		
	40대 이상(c)	89	3.94	0.52		

*** $p<.001$

또한 일반적 특성 중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93$, $p<.01$)<표 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이 600만원 이상 집단에 비해 자녀관이 부정적이며, 300~450만원 미만 집단 역시 600만원 이상 집단에 비해 자녀관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로 지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관 비교

종속변인	소득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사후검증
자녀관	300만원 미만(a)	53	3.54	0.76	3.93**	a<d, b<d
	300~450만원(b)	78	3.63	0.72		
	450~600만원(c)	65	3.74	0.69		
	600만원 이상(d)	45	4.00	0.51		

** $p<.01$

한편 자녀수와 자녀관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r=.36$,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조사대상의 자녀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표 17>.

<표 17> 자녀수와 자녀관간의 상관관계

변인	자녀수
자녀관	.36**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천안시민의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자녀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안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발전방안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 및 혜택경험과 관련해서 고운맘카드, 출산진료비, 산전검사, 의료시설 지원비, 출산지원금, 철분제, 출산휴가, 셋째 출산 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 자녀양육 관련해서는 양육수당, 양육 및 보육비 지원, 육아휴직, 아이돌보미, 의료비 절감 및 지원, 아이사랑 카드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만족 수준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혜택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권리로 인식되는 부분이라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임신, 출산 및 양육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육 및 건강가정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지도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설립된 직장맘지원센터는 천안시가 서울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일·가정양립 및 자녀양육비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서’가 가장 높고, ‘자녀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자녀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의 주요원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의 신

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는 정책적 또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양육관련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인 출산장려 정책보다 자녀양육 지원정책인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등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안시 특화 정책인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급'과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낮고,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인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비교적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인식이 낮은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자녀양육 지원정책 모두 전반적으로 본인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의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삼식, 정경희, 2010; 정다운, 2017)과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천안시 특화 정책인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지급',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는 다른 지원정책에 비해 응답자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연관이 되는 문제임으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책들은 폐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들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 및 혜택 만족은 낮은 반면 자녀는 있어야 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편이며, 자녀관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후 정책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나라 저출산문제 해결의 핵심요소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의 자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응답이 29.0%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90%가량 된다는 연구결과(이삼식,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자녀가치(Value of Children: VOC)를 크게 보는 문화권이 개인의 출산동기와 출산경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관이나 자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높은 것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은 결과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여성의 출산부담으로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정책 인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고졸집단이 대졸 집단에 비해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조사대상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로는 향후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있는 집단은 출산의도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관을 비교한 결과, 40대 이상 집단은 20대와 30대 집단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 또한 자녀관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로 지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장려 및 지원정책의 대안 마련에 대한 방향을 시사한다.

본 논의를 토대로 향후 천안시 출산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천안시는 지난 4월 도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선제대응하기 위해 ‘2030 인구문제 선제대응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천안시 인구정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일-가정 양립사업, 교육, 지역사회 민간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생애주기적 저출산 극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Mom 편한 생애주기’를 주제로 일·가정 균형사업(직장맘 노무사법률상담 및 육아상담, 직장맘대상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직장맘자녀학습 지원, 남성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문화교실 운영 등), 임신·출산·육아교육(임산부요가, 베이비마사지, 임산부의 날 사진공모전, 유모차견기대회 등), 출산장려네트워크(지역행사 연계 직장맘지원센터 및 출산장려 홍보관 운영, 민·관 협업 출산장려공동캠페인 개최 등)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중부매일, 201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아관련 각 기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천안시의 출산·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분산에서 오는 접근의 용이성과 홍보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경기권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출산·보육 서비스 패키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원스톱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가정지원센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보건소를 복합센터로 건립하여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천안시의 발 빠른 정책과 지원노력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지역복합센터’ 구축은 서비스전달체계 연계라는 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천안시만의 특색을 감안하여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인식적인 면에서 낮은 것은 정책에 대한 홍보방법의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 후쿠이현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를 위하여 ‘지역중매쟁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가 병치료 중인 경우에도 일을 쉴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환아 데이케어’ 제공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원, 2017). 이는 지역단위 거버넌스 역량강화의 측면에서 민간 네트워크의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천안시 전체 시민이 저출산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육아 공동체 운영 등이 연계 추진되어야 저출산 원인의 양육비, 교육비 등의 금전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육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천안시는 저출산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천안시-대학교-민간-시민이 협력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이 ‘엄마아빠 동생 낳아주세요’를 천안시 어린이집 영유아 6,000명을 대상으로 인형극과 동화구연을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와 대학이 함께 하는 출산장려 퍼포먼스 경연대회 등 저출산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비록 당장의 실효성은 없다 하여도 저출산문제에 장기적인 효과를 높이는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우수사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하나 여성의 출산가능 연령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이들의 개인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정책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효성이 높은 정책과 서비스에 선택과 집중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당 및 급여확대, 노동 시장의 유연성 등과 같은 사회

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자녀관이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같은 국민적 합의와 동참이 매우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기초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86, 6-12.
- 김정옥(2005).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과학논총**, 4, 75-87.
- 김태현, 손준중, 김지경, 박강용, 김혜환(2006).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도미향(2015).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전업주부와 직장인의 성인지력과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 친화적 직장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3), 543-561.
- 문은영, 권미애, 전해정(2016). 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과제. **이화젠더법학**, 8(1), 91-121.
- 박현옥(2013).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민환(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장려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6). 2016-2020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신효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계숙(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1), 111-125.
- 이경숙(2012). 저출산 사회에서 지역사회연계와 정책참여를 통한 가정과교육의 역할.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1), 73-84.
- 이명석, 장한나, 이승연, 민연경, 최상준(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 **GRI 연구논총**, 14(2), 29-64.
-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행. **보건복지포럼**, 111, 5-17.
- 이삼식(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정경희(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원희(2004).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으로 출산 안정 도모**. 한국개발연구원.
- 장석주(2012). 보육정책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영(2017).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다운(2017).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아리마분석을 사용하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부매일(2017). 천안시, 2030 인구문제 선제대응 인구정책팀 본격 가동. 2017. 8. 3.
- 충청투데이(2019). 출산을 올려라. 천안시, 첫째 둘째도 출생 축하금. 2019.
- 최숙희, 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통계청(2011). 2011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2019).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101003호 인구동향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보도자료

한영숙(2009). 가임연령 미혼 남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과 차이 비교-D시를 중심으로-. **한국 영유아보육학**, 57, 315-331.

Abstract

A Study on th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Status among Cheonan Citizens an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Do, Mi-Hyang* · Choi, Woon-Sun** · Kim, Min-Jung*** · Kim, Eung-Ja****

This study examines th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status among Cheonan citizens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and values of having a child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order to provide the base information for future policies and development plans concerning fertility rate.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241 citizens living in Cheona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re was a relatively high awarenes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the awarenes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upport was quite low. Furthermore, people felt that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olicies had a little impact on an individual's birth plan. Second, while there was a positive outlook of children, the process of child-rearing was regarded as overwhelming and there were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while working. Third,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 there were significant attitude differences regarding the outlook of having a child, the perception of the support policies for childcare and the attitude of the support policies for pregnancy, childbirth.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the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olicies in Cheonan.

Key Words : Cheonan Citizen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